

# 가계빚 증가세 5년만에 꺾였다

### 지난해 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 1450조 '사상 최대' 가계신용 증가율 8.1%... 정부 목표치 근접

폭주하던 가계빚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가계빚이 145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증가 속도는 5년만에 처음으로 둔화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책으로 가계 빚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 백화점, 자동차회사의 할부 등 판매신용 금액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450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연중 증가액은 모두 108조 4000억원(8.1%)으로 1년 전 증가액인 139조 4000억원(11.6%)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이는 지난 2014년(66조 2000억원)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가계빚 증가폭은 2012년 47조 6000억원에서 2013년 55조 2000억원 늘어난

뒤 2014년 66조 2000억원, 2015년 117조 8000억원, 2016년 139조 4000억원씩 꾸준히 확대되다 이번에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최근 3년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평균 연 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완연히 낮아졌다고 보건 어렵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가계빚 증가율 8%대에는 근접한 수준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1370조 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조 3000억원(7.9%) 늘었다. 전년 증가액인 131조 9000억원(11.5%)보다는 둔화된 수치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수요가 꺾인 영향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464조 2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21조 6000억원 늘어 전년(40조 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기타대출 잔액은 196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 6000억원 증가했는데, 전년 증가액(12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현금 연후 등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한 점도 신용대출 증가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연중 신용대출 증가액은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한은 문소상 금융통계팀장은 "지금의 용도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민간 소비가 양호해지면서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나 상가 임대료

등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따른 수요,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수요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10조 8000억원 늘어 전년 증가액(14조 2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기타대출도 2016년 28조 4000억원 늘었지만 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1조 8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의 제2금융권 대출 총량 규제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기관과 공적금융기관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은 395조 5000억원으로 연중 34조 4000억원 늘어 전년(35조 5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판매신용은 80조 8000억원으로 연중 8조 1000억원 늘었다. 1년 전 증가액(7조 6000억원)보다는 다소 늘었다.

/뉴스



## 전주상의, 개정세법 전북지역 설명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상공회의소 신청사 7층 대강당에서 도내 기업체 경리·회계담당 부서장, 실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17년 개정세법 전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김진홍, 김동원 주무관 2명이 강사로 나와 국제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법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한편, '개정세법 설명회'는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을 개정하여 공포, 시행함으로써 회원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주상공회의소가 매년 기획재정부·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김민지 기자

## '어린이 안전장 체험 박람회'

### 현대자동차,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 개최

현대자동차(주)는 행정안전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주최로 어린이들이 꼭 배워야 하는 안전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7회 어린이 안전장 체험 박람회'를 22일(목)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7회 어린이 안전장 체험 박람회'는 현대자동차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과 동시에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현대차 어린이 대표 사이트인 '키즈현대 홈페이지(http://kids.hyundai.com)'를 통해 배운 안전 상식들을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이 외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스포츠 안전 체험 VR을 비롯 3개의 VR 체험 부스와 반려견 안전 교육 등 약 30여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 인형극, 종이접기, 색칠하기 등의 이벤트도 무도모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모빌리티 체험에서는 현대자동차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소(NEXO)'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RSPA)'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특히 넥소는 수수와 산수의 결합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운행하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까지 해 박람회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공기정정기 역할도 한다.

박람회 입장은 1월 31일(수)부터 2월 13일(화)까지 키즈현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한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의 경우 가능하며, 어린이는 온라인 '어린이 안전장 학습하기'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 안전증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현대자동차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 인원을 고려해 매회 개장 후 한 시간 반 이후부터 현장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금화)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의원 54명, 특별의원 4명을 제2차 의원당선자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 21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의실(4층)에서 제23대 회장 및 임원 구성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일후보로 추대되어 김적우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제 23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 10인, 상임의원 11인, 전형위원회의에서 선정한 뒤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

정됐고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였으며 사무국장에는 현 정일환사무국장이 재선임됐다.

김적우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지난 3년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회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4개 시군지역 상공인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다"며 "서남권 4개 시, 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산업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을=김대환 기자

## 금감원,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우선 과제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횟수와 인원을 대폭 늘린다.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출체계와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등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 비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금감원의 검사업무는 크게 영업행위 검사와 건전성 검사로 나뉘는데 영업행위 검사에 보다 신경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업행위 검사횟수는 지난해 663회에서 올해 736회로 11.0%, 검사인원은 1만46명에서 1만4314명으로 42.5% 확대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보험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뉴스

##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유지 못해... 형벌조항 정비"

### 김상조 공정위장, "시장구조개선 명령제 도입, 시급하지 않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간보고서 발표를 통해 가맹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후 하도급법 중 기술유용 분야와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했다.

이날 최종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논의결과가 담겼다. TF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손보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통일된 입장을 내지는 못했고, 전면폐지, 선택폐지, 제도보완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과도한 형벌조항과 검찰과의 협업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형벌조항이 많다.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 규정이 담겨있다"며 "경쟁법과 기업이슈를 너무 형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선진국 사례처럼 경쟁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법집행 실무에서 검찰과 협업을 해야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 그동안 노력이 있었지만 큰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공정위는 형벌조항 정비와 검찰 협업체계 구축을 함께 논의하면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구조개선 명령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적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